



「치산녹화」와 「경제임업」 이야기 (2)

최민휴 / 농학박사·협회 고문

(2) 한국임업경제학(韓國林業經濟學)의 태동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정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데 임업경제학이 그 이론적 골간이 됐을 뿐만 아니라, 임업계 외부인사들에게 치산녹화와 임업발전의 긴급성을 설득하여 우리의 협조자를 만드는 데도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1960년대 초 아직 치산녹화의 초창기라 할 수 있는 단계에서 필자가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임업경제학을 개척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던가. 거기에는 실상 자의반 타의반(自意半 他意半)으로 모험을 하게 되었으나 그만한 시대적 배경이 깔려 있었다는 점에서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도 생각된다.

4.19혁명 이후 내각제 헌법 하의 행정수반이었던 장면(張勉) 국무총리는 운명을 걸고 국토건설(國土建設)사업을 착수하였고, 정부 안에 부흥부(復興部)를 두어 그 구심적 역할을 맡게 하였다. 매일같이 부흥부에서는 각 경제부처에 공문을 시달하고 거기에 맞추어 부문별 사업을 설명함은 물론 전국 1,400여면(面) 단위 행정구역 단위로 국토건설계획을 작성하는 게 일과였다.

그런데 문제는 부흥부 공문 내용에 들어있는 경제용어와 개념들이 농림부 직원들에게는 매우 생소하여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경제에 조여있는 분들을 찾아가 해석을 듣고서야 작업하기 일췌였으니 참으로 커다란 충격이었다.

당시 산림국 직원들에게는 이제부터 산림공무원이 되려면 「경제」를 모르고선 할 수가 없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4년간 정규대학 임학교육을 받은 필자로서도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하면 농

림분야도 경제의 한 분야인 이상 당연한 것이었고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생각마저 들게 되었다.

필자는 방과후에 하숙집으로 가지 않고 충무로 일본서점과 종로 서양서점을 섭렵하며 관련서적을 닦치는 대로 구입하여 탐독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몰두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선진국에는 이미 임업경제학(Economics of Forestry)이라는 학문분야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임업경제학이야 말로 한국의 임정현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동의보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당시 산림국 김철영 조림과장님은 일찍이 미국 씨라큐스대학에서 이 방면의 학문을 닦으신 분이었으나 우리말 개념과 잘 연결되지 않는 듯 하여 매일 방과 후에 몇 사람이 모여 임업경제분야에 대한 토론을 갖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5.16 군사쿠데타'가 터지고 혁명정부는 그 혁명공약으로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 하는 것이었으며, 급한 김에 장면정부가 만들어 놓은 국토건설계획을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라 이름을 바꾸고 부흥부 대신 경제기획원을 발족시켜 그 안에 1차산업국을 두어 농림경제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이리하여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한 혁명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경제개발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경제와는 남남으로 여겨오던 우리 산림공무원들로서는 실로 난감하기 그지없었으나 산림정책의 골간도 경제정책 체제로 편입시키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같이 새로운 행정분위기에 적응함에 있어서 사방공학, 조림학 같은 전통 기술분야 임업전문 지식으로서의 한계가 있었고, 임업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이론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개발계획 작성이나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 부임해 온 농림부 장관도 선진국에서 경제를 전공한 분들이었고 전문기술용어만으로는 핀잔을 듣기가 일쑤여서 결재 한 번 받으려면 진땀을 흘려야만 했고, 사기는 위축될 대로 위축되었다.

산림기술 관료들에게는 실로 자존심 상한 위기상황이었으나 그렇다고 임과



대학에도 임업경제학을 전공한 교수 한 사람도 없었고 물론 강좌도 없는 답답한 현실이었다. 그것은 산림행정의 위기일 뿐 아니라 한국 임학의 위기이기도 하였다.

당시 산림국 엘리트 선배들은 임정현실과 미래에 대하여 우려와 불안심리가 짙어만 갔고,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임업경제학 공부에 나서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을 기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필자의 등을 떠밀면서 한국임정의 미래를 위해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아직 홀몸이고 학구적인 재질이 있으니 몇 년간 공부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다른 대안이 따로 보이지 않았다.

모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농업경제학과 김준보 교수님 등 권위 있는 분들로부터 일반경제학을 배우고 그 위에 이를 임업의 특성에 맞도록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종로에 있는 영어학원, 을지로에 있는 독일어학원에 다니면서 고등학생들과 나란히 앉아 어학공부를 하여 입학시험에 대비하였다. 1973-4년은 필자에 있어서 거경궁리(居敬窮理)의 마음가짐으로 경제학 탐구에 몰두하던 시절이었다. 농업경제학과 학부 1-4년 과정과 석사 1-2년 과정 등 6년 과정의 대부분을 2년간에 섭렵하려고 학점과 상관없이 강의실을 쫓아다녔다. 시험이나 석사학위 논문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입학 전에 워낙 쓰라린 현실체험을 했던 터라 교수님들의 강의내용이 한 마디도 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오롯이 화살처럼 뇌리에 꽂혔다.

2년 코스를 마치고 나니 필자 생각으로는 희미하게나마 임업을 통찰하는 마음의 눈을 하나 얻은 듯 하였다. 그것은 산림안(Forest eye)이 아니라 임업안(Forestry eye)이라 여겨졌다. 보이는 숲을 보는 기술의 눈이 아니라, 그 숲 뒤에 숨어있는 그 본질 즉 보이지 않는 임업을 뚫어보는 사회경제적 안목이라 할만한 것이었다.

임업안을 얻은 기쁨, 그것이야말로 진정 학문의 열매요, 고뇌의 소산이었는데도 모른다.

눈에 보이는 「산림」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임업」의 외화(外化)이므로, 임업이 본질이라면 산림은 그 현상형태(phenominon)임을 터득한다는 것이야말로 임학의 재발견이라 할만한 진리라 여겨졌다.

이는 1906년 이 땅에 근대임학(Modern Forestry)이 들어온 이래 실로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었다. 전통적인 산림학자 현신규 박사로서도 새로운 임학관을 갖게 할 만큼 큰 임팩트였다고 여겨진다.

1967. 1. 6 순화동 삼령빌딩에 산림청 현판이 걸리면서 우리 임업인들은 희망과 환호 속에 연일 축제분위기였다.

초대 김영진 산림청장은 본시 육군대령 출신으로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을 지내다 산림청장으로 부임했으므로 다소 생소한 분위기였으나 차장으로 승진한 조하욱 차장은 산림청을 만들어낸 주역으로 자처하면서 화제의 중심에는 늘 그분이 있었다.

그분은 현신규 박사같은 원로들과 회식이라도 하는 자리에서는 늘 실무작업을 맡았던 필자를 거론하면서 더욱 많은 임업경제학 전공 인재들을 많이 배출시켜달라고 강조한 바람에 대학에도 임업경제학 강좌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마침 아끼던 제자 송희연이 미국 씨라큐스대학에서 임업경제학 박사과정에 있었으므로 편지를 띄워 학위를 마치고 돌아오면 고국에 돌아와 임업경제학 강좌를 맡아달라고 연락을 취하셨다.

현박사의 편지를 받고 감격했던 송희연은 지도교수이자 임업경제학과 주임교수였던 Duerr박사에게 이를 전해드렸고 그는 송희연에게 장차 한국 임업경제학의 아버지(The Father of Korean Forestry Economics)가 되라고 격려해주었다 한다.

송희연 후배는 필자에게 한국의 임업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쓸 것이니 관련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보내주었더니 1969년 무렵 학위를 마치고 귀국하였으나 모교에서의 임업경제학 강의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목재화학분야를 전공해 오던 박명규 교수가 맡기로 교수회의에서 의결되는 바람에 한국 임



업경제학의 아버지가 되지 못한 채 새로이 발족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입사하게 되었던 것이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긴 점이었다.

그러나 임학 후진들은 새로운 개척분야를 찾던 참에 새로 생긴 임업경제학은 필시 매력있는 분야여서 지망생이 쏟아지게 되었고 이 방면 후학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배출되어 1972년경에 필자는 이들을 모아 임업연구원 안에 「임업경제연구팀」을 구성하여 이 분야 연구를 펼치기 시작하게 되었고 1980년 무렵에는 연구원과 대학에 있는 분들 50여명을 모아 「한국임업경제연구회」를 설립하고 필자가 그 초대 회장직을 맡았다. 이 연구회가 지금 한국산림경제학회로 발족하게 되었다.

서양에서는 「Forestry」라는 단어의 뜻이 「임업」이면서 동시에 「임학」이 된다. 그 이유는 임학의 본질은 임업을 연구하는 임업학(林業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학의 연구대상은 산업으로서의 「임업(Forestry)」이어야 하며, 이 임업을 기술적인 면에서 접근하기 위하여 자연과학으로서 「산림(Forest)」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치가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임학이 그 본령인 임업학을 도외시하고 자연과학 중심의 산림학이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여기에는 필시 한국 임학의 역사적 책임(Historical Responsibility)이 있다고 보아진다.

한국임학의 역사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일본 제국주의는 한반도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로부터 양강 유역 채벌권을 넘겨받아 산림자원 수탈에 힘쓰는 한편, 산림기술자를 파견하여 양묘와 조림기술을 전파하면서 수원, 이리, 사리원 등에서 근대 임학교육을 실행하여 한국인 산림기술자를 양성하였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경제, 정책 등 사회과학 분야는 배제함으로써 조선인들의 의식화를 사전에 차단하려던 식민교육정책이었을 것임에도 우리 한국의 임학은 당시는 물론 건국 이후까지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식민지 교육을 답습하여 산림기술분야에 편중하게 됨으로써 한국 임학교육의 파행성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고 이러한 1세대 한국 임학자들로부터 임학교육을 받은 한국 임학인은 자연과학의 눈으로 산림은 보되, 사회과학의

눈으로 임업을 보지 못하는 외눈박이 전문가를 양산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를 통절히 깨우쳐 준 것이 제2, 제3공화국 시절 국토건설사업이요 경제개발계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니 당시 세상을 품미하던 경제제일주의 국정분위가 없었던들 외부적 충격 없는 한국의 임학은 자연과학일변도 산림기술제일주의의 우물을 벗어나지 못했을 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리하여 강력한 외부적 충격으로 한국 임업경제학의 여명이 열리고 한국 임학에 사회경제적 개념이 새로이 도입됨으로써 임학의 일반화를 통하여 타분야 인사들과 대화의 통로가 트이게 되었고 산림과 임업의 특수성을 이해시킬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게 된다.

1967년 임정기구 확대개편 작업은 물론 치산녹화계획과 임업장기개발계획 작성에 임업경제이론이 동원되고 임정목표 설정에 임업국민총생산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산림의 공익성도 막연히 말로만 허풍을 떨고 있는 듯한 울타리를 깨고, 전국 산림의 공익기능을 계량화하여 화폐가치로 평가하고 GNP와 대비시킴으로써 산림과 임업의 보편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다.

이로써 이 땅에 임업경제학의 도입은 한국임학의 파행성을 깨고 균형잡힌 임학의 길로 들어서게 했을 뿐 아니라 근대임학의 발전과정에서 그 역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한국 임학인들로 하여금 산림과 임업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구안자(具眼者)에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해 왔다 할 것이다.